정몽준 "새누리, 박근혜 1인 지배체제 … 자생력 상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영명 여사. 김형수 기자

대선 출마 선언하며 비판

새누리당 정몽준(61)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은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차별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정치·경제·복지·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박 위원장과 각을 세웠다.

특히 외교와 관련해 "국내 정치 안에서만 성장한 지도자는 현실에 과연 맞는가"라며 "바깥세상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나 공부 없이 몇 사람 만났다고 해서 지식과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다"고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으로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기여한 자신과 달리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진 활동이 없는 박 위원장을 겨냥한 셈이다. 정 의원은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을 통해 국제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문제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북관계"를 강조하는 박 위원장과 대조적으로 "(북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 원칙 없는 대북관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책마다 박근혜와 차별화

국내만 경험한 지도자, 현실에 맞나

유연한 대북정책, 북을 너무 쉽게 봐

포퓰리즘 아닌 지속가능 복지로

당내 문제에 대한 비판 강도는 더 세졌다. 그는 "전당대회가 2주 남았는데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다"며 "나온다는 박근혜계는 등록을 안 하고 있고, 이명박계는 나가봐야 당선이 안 되니까 안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의중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누구도 당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본지 4월 27일자 1면〉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의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도자는 보이는데 정당은 보이지 않는 건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인지배 체제'다. 좋게 말하면 리더십을 확고히 장악했지만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도 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박 위원장이 반대하는 데 대해선 "박 위원장이 10년 전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하는데 한나라당은 왜 안 하느냐'며 탈당한 분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박근혜 계인 윤상현 의원은 "박 위원장은 당시 제왕적 총재 폐지와 당권·대권 분리를 요구하며 탈당했다가 수용돼 복귀했으며 국민참여경선 룰은 탈당 전에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박 위원장과 장충초등학교 동창이다.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알지 못했고, 정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테니스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고 여러 번 운동을 함께했다고 한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복지정책은 분별력 있게 해야 한다. 전 세계 경제가 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흐름이다. 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생각한다."

-이명박계와 박근혜계가 화합이 됐다고 생각하나.

"박 위원장은 당 대표 시절 파벌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왜 그런 말을 안 하는지, 지금은 파벌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 의원은 이번이 두 번째 대선 도전이지만 당내 경선 도전은 처음이다. 2002년 대선 때는 자신이 '국민통합21'을 만들어 후보로 나섰다. 200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합류한 그로선 당내 기반이 취약한 게 약점으로 꼽힌다. 4·11 총선을 거치면서 측근으로 분류되던 전여옥·이사철·정양석·정미경 의원 등이 낙마했고, 당내 현역은 안효대 의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김능환 선관위원장, 관행 깨고 임기 보장 받는다

이제까지진 대법관 임기 끝나면 사퇴

"임기 채워라, 최소 대선까진 맡아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퇴서 반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됐다고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관행은 옳지 않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임기(6년)를 채워 달라. 최소한 대선까지는 맡아 달라"면서 사퇴서를 반려했다고 한다. 양 대법원장의 사퇴 반려는 명목뿐이던 선관위원장의 임기제를 확립하고 선관위의 독립성 확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대법관 임기가 7월 초 만료되는 김능환(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다. 헌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의 선관위원이 호선(互選)하게 돼 있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맡아 왔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지명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중앙선관위원장직도 함께 사퇴했던 관례를 깨고 김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4·11 총선이 끝난 직후 곧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중앙선관위원장직 사퇴서와 중앙선관위원 결원통보서를 제출했다. 7월 10일 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 임기가 끝남에 따라 관례대로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려 했던 것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진보당 비례 부정의혹 조사결과 이르면

유시민 "중대 결단 상황 생길 수도"

일각선 "당권파 사퇴는 못 시킬 것"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순위 조작 등의 경선 부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당 관계자는 "이르면 1일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가 풀어놓을 '보따리'에 대해 각 계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 내에선 비례대표 경선 당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다만 진상조사위가 공개할 '진실의 수위'와 '문책 대상'이 관심의 초점이다. 당내에선 당권파(경기동부연합)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1·2번, 윤금순·이석기 당선인의 사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열린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민주노동당 출신의 송재영 군포시위원장은 "부정선거의혹이 진보정당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투명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온라인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소스코드'를 ⟋

"민주당 대주주 둘이 담합한 걸로 비친다면 잘못한 일"

〈이해찬·박지원〉

야권 원탁회의 좌장 백낙청 인터뷰

'진보진영'의 오랜 이론가이자 원탁회의의 좌장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자에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원탁회의가 하는 일은 (야권에 대한) 잔소리·쓴소리"라고 역할을 규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원탁회의와 민주통합당 이해찬 상임고문, 박지원 최고위원 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해찬 고문, 박지원 최고위원 쪽에서 원탁회의를 아전인수 격으로 활용한 건가.

"이해찬 고문이 원래 원탁회의 멤버였는데, 세종시에 출마했다. 당선되고 나서 인사 못하고 떠나 죄송하다고 오찬에 초대했는데 꽤 큰 모임이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지, 전체가 모여서 의견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 총리(이 고문 지칭)가 인사말 하면서 '기왕에 정치권에 복귀했으니까, 당을 추스르는 데 앞장서 보겠다'면서 당 대표 경선에 나갈 뜻을 비쳤다. 나를 포함해 우리 중 몇 사람이 '당신이 나간다면 듣자 하니 박지원도 출마한다고 하는데, 계파 싸움으로 가면 국민이 뭐라 하겠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박지원을 만나 역할분담을 제안했는데,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덕담 차원에서 '잘해보라'고 한 게 다다. 누가 원내대표를 맡고 누가 대표를 맡는지 우리가 알 바 아니었다."

안철수처럼 CEO로 성공한 사람

국가운영까지 잘한다 볼 수 없어

박근혜, 선거 땐 내공 대단해도

지역주의와 낡은 세력에 의존

통합진보당 조직문화 폐쇄적

이번 전당대회서 뜯어고쳐야

-원내대표 경쟁자들은 이해찬·박지원 연대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대주주들의 한 사람이다. 힘을 합치는 건 좋은데, 담합으로 비친다면 일처리를 잘못한 거다. 당원이 '당신이 그렇게 던지고 나오면 받들겠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야지. 민주당이 빠른 시간 내에 주요 인사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여, 선거에서 뭘 잘못했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반성을 보이고, 토론 과정에서 원내대표-당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그런 과제를 푸는 과정에서 '계파 싸움 하지 말자', 이런 넓은 공감대가 먼저 형성된 뒤 이해찬·박지원이 받았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나 같은 아마추어가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날(이 고문과 오찬 한 날) 우리가 원탁회의가 사적으로 한 얘기는 '계파싸움이 국민들 눈에 곱게 안 비친다'였다. 그건 여전히 유효한 얘기다."

그는 인터뷰 도중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대선주자군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언급했다. 다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고문에 대해서만 평가를 유보하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선거라는 단기전에서 아주 대단한 내공을 발휘했다.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맞게 국가를 경영하는 건 다르다. 미래를 얘기했지만 뚜렷한 비전을 보여준 건 없다. 상대방을 불안세력으로 몰고, 색깔논쟁을 펴고,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낡은 세력에 기대 이겼기 때문이다."

-야권에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있나.

"뚜렷한 후보가 없죠? 대통령 선거라는 건 두 유력한 후보가 다투는 건데, 야권에서 시원한 후보 안 나오면, 비전이나 정책에서 우세해도 선거에서 못 이기는 거다.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은 어떤가.

"아직 출마도 안 한 개별 인사에 대해 뭐라 말하기 힘들다."

-정치지도자로서 안철수 원장은 어떻게 보는가.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한 CEO가 국가운영도 잘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CEO와 정치지도자의 자질은 다른 것이다. 안 원장은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와 같은 추상적인 말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일부 언론은 백 교수가 '대선주자들이 천안함 문제를 과감히 들고나와야 한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어느 분야든 담대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우리 풍토에선 남북문제, 복지 문제도 자칫하면 색깔 프레임에 걸리게 돼 있다. 시쳇말로 '쫄지 말라, 졸지 않을 담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였다."

-통합진보당에서도 총선 후 비례대표 순위조작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6월 3일)전당대회를 통해 당 체제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조직문화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현재 진보당의 주류는 옛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의 주도세력은 옛 운동권 세력이다. 독재정치를 돌파하면서 민중·통일 운동을 한 이들인데, 그 시기에 형성된 조직문화가 폐쇄적이다. 하지만 이젠 그런 문화로는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소수의 추종자만 확보할 수 있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대선에서 원탁회의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지금까지는 야권의 통합과 연대에 있었다. 통합하고 연대하려면 소통을 해야 한다. 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거 외에는 원탁회의가 관여하지 않는다."

강인식 기자 kangis@joongang.co.kr

◆백낙청 교수=1938년 1월 대구 출생.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납북되면서 유년기부터 분단의 고통을 체험했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브라운대를 거쳐 하버드대 대학원 영문과에서 D H 로런스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명예교수다. 66년부터 진보 성향의 계간지 『창작과 비평』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비판적인 논평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현실정치에 대한 참여도 활발하다. 2009년 박원순 변호사, 함세웅 신부 등 사회단체 지도자 120명과 '희망과 대안'을 조직해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 선거연합을 이끌었다. 2011년 7월엔 문재인·이해찬·김상근·배승희 등 야권 인사 21명이 모인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를 발족시켜 야권 통합운동의 좌장 역할을 해 왔다.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가 3월 야권연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은희 살림정치 여성행동 운영위원, 백승헌 전 민변 회장, 황인성 시민주권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 [중앙포토]